

카탈루냐 기본소득, ‘잠시 멈춤’ - 국회에서 열린 ‘카탈루냐 기본소득 간담회’ 후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앙헬Angel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가끔 카탈루냐 뉴스를 찾아보고 짐작한 대로였다. 앙헬은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 미디어담당관이다.

본래 이 글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스페인 카탈루냐주와의 온라인 간담회 후기를 써달라는 청탁에 따라, 간담회 이모저모를 서술한 다음 올해 카탈루냐에 예정됐던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밝은 톤으로 덧붙이려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범사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난 3월 10일 카탈루냐주 의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표결은 사회당과 훈트Junts가 주도했다. 훈트는 친기업 정당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했다가 돌아섰다. 앙헬은 이렇게 썼다.

“그나마 다행은 카탈루냐 시범사업 사무국이 여전히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주정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했을 때) 사무국과 시범사업이 모두 폐쇄되었지만, 카탈루냐 정부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카탈루냐 주정부가 사무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보면 시범사업 추진 의지는 아직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취소된



카탈루냐 간담회 카탈루냐측 참가자(정면 가운데가 누리아 쿠엔카 레온 카탈루냐 주지사실 사무총장. 그 오른쪽이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앙헬은 강조했다. 카탈루냐 연립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지하는 새 동맹을 구성하면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애초 쓰려던 방향, 즉 국회 간담회를 소개하며 ‘기본소득 지지자들이여, 카탈루냐를 주목하라!’ 하고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 상황조차도 현실 속 기본소득-올여름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의 한 면이다. 카탈루냐 상황은 기본소득 운동에서 만나는 현실 장벽을 재확인하게 하며, 이 장벽을 넘거나 우회하는 전략의 고민을 던진다.

이 글에선 카탈루냐주에서 준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국회 간담회 행사의 후기를 덧붙인다. 그리고 카탈루냐주 기본소득 운동이 주는 시사점을 짧게 부연한다.

‘잠시 멈춤’ 카탈루냐 기본소득, 어떤 내용인가

2021년 봄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연합은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공동과제로 합의했다. 집권 정당연합은 주로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정당들로 구성됐으며 다수당은 카탈루냐 공화 좌파당ERC이다.

2021년 6월에 주지사실¹⁾ 직속으로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설치됐고 세르히 라벤토스Sergi Raventós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사무국은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1)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의 공식 직위는 대통령presidente이다. 다만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스페인 정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주정부’ ‘주지사’ 명칭을 쓰기로 한다.

받아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된 시범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금액은 성인 기준 월 800유로(한화 110만원)를 지급한다. 이는 빈곤선을 넘는 수준이다. 미성년자는 월 300유로(한화 43만원)로 한다.
- 대상은 5천 명이다. 25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다. 2500명은 카탈루냐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2500명은 지자체 전 주민이 포함되도록 2개 지자체를 선발한다.
- 두 그룹 모두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해 실험집단과 대조 연구한다. 지자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3~5개 지자체를 합한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 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며, 사업 이후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소득 최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차 기본소득을 실제 도입할 때 최상위층이 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조세개혁을 한다는 가정을 시범사업에 반영한 것이다. 즉 시범사업에서는 증세가 없는 대신 최상위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5천 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총예산은 8500만~9000만 유로(한화 약 1200억 원)다.²⁾ 5천 명은 카탈루냐 전체 인구는 770만 명의 0.1%가 안 된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 스페인 복지시스템은 빈곤 감소 효과가 매우 부족하다. 스페인 정부의 최소생활보장제도IMV는 빈곤층의 13.3%만 수급권을 보장한다. 약 87%의 빈곤 시민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³⁾

카탈루냐 사회경제적 상황은 스페인 평균보다 낮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를 겪고 있다.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20%이고 실업률은 10%에 조금 못 미친다. 카탈루냐의 최저소득 보장제도RGG는 28%의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줘서 IMV보다 조금 낮지만, 지원 금액은 빈곤선의 70% 정도일 뿐이며 여전히 많은 대상자를 배제한다.⁴⁾

카탈루냐 주정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혁신적 해결책’을 찾고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존의 조건부 지원 제도의 기술적, 도덕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설계했다.

그런데 사무국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은 한계가 많다. 우선순위를 무조건 성과 개별성에 뒀고 보편성을 덜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실험 참가자 수도 적었고 지급액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카탈루냐 시범사업 설계에 반영됐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빈곤선을 상회할 만큼

2) “5천명에게 월 100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오준호, 오마이뉴스. <https://omn.kr/1ztoz>

3) 같은 기사.

4)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발표문, 세르지 라벤토스.



카탈루냐 간담회한국측 기념촬영(좌로부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용혜인 상임대표)

높다. 월 800유로(약 110만원)는 한국의 생계급여와 비교해도 상당히 관대한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2023년에 약 62만 원이다. 지자체를 선정해 인구 전체(상위 10%는 제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올해 2월 기준 4241명이다. 이를 보면 카탈루냐 시범사업이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액수에선 차이가 크다(이 정도로도 사업 시행 1년 동안 청산면 인구가 346명 늘었다고 한다).

카탈루냐 주정부의 ‘유럽에서 가장 야심찬 시범사업 계획’이라는 설명은 진실이다. 실제 시행되어 효과가 속속 나타나면 각국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무국의 설명처럼, 잠시 연기되었을 뿐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길 바란다.

국회에서 열린 카탈루냐 기본소득 간담회

필자는 지난해 7월 세르지 라벤토스 사무국장과 서면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다 (“5천명에게 월 100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윤석열 정부 집권과 함께 밀려오는 사회 퇴보가 갑갑하고, 담대한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다 윤 정부 집권을 도와준 민주당이 답답한 터에, ‘카탈루냐 찬가’의 고장에서 들려온 기본소득 실험 소식은 필자를 설레게 했다.



카탈루냐 간담회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장면

필자의 인터뷰 요청에 라벤토스 사무국장, 앙헬 미디어담당관이 적극 호응했으며, 덕분에 인터뷰 기사는 꽤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카탈루냐주의 야심찬 시범사업 계획을 한국 정치권에도 알려 다소 정체된 한국 기본소득 논의에 자극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에 제안하고 내가 카탈루냐 사무국에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14일에 온라인(zoom)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이란 제목이다(이하 ‘카탈루냐 간담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같이 행사를 주최했다.

필자가 간담회 사회를 맡았다. 한국에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카탈루냐에선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제목으로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한국 국회엔 해외와 교류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카탈루냐 간담회는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문 동시통역사 두 명이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했다.

한국 참가자는 사회자와 발표자 외에 현장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서영석·윤영덕 의원,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서정희 군산대 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했다. 카탈루냐 사무국 참가자들은 온라인화면 저편에 모여 앉았다. 라벤토스 사무국장 외에 누리아 쿠엔카 레온 주지사실 사무총장, 마크 발라게르 카탈루냐주 공공정책연구소장, 다비드 카사사스 시범사업 과학위원장, 재역 윤 강 카탈루냐주 한국연락소 대표, 사회학자인 돌로레스

메디나 포사디에르 등이 참가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안효상 이사장은 “한국은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이 한국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고민했다. 2016년 기본소득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기본소득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후 기본소득 논의가 쇠퇴한 듯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이나 전남교육청의 학생기본소득 등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좁은 의미의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도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 시범사업 내용,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밝혔다(시범사업 내용은 이 글 앞부분에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자체 단위에 보편 지급함으로써) 개인, 가족, 집단에서 일어나는 파급효과, 시민활동 참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관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탈루냐에서 우리 목표는 빈곤의 퇴치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밝히고, “유럽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실험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 참가자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최상위 10% 소득자를 제외한 것이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하고 질문하자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앞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개혁으로 소득 최상위 10%로부터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범사업에 반영했다”라고 답했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시범사업이 보편성 훼손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조세개혁까지 포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찾겠다”고 부연했다.

사회학자 돌로레스 메디나 포세디에르는 “설문조사 때 시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하고 조사하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이 늘었다”라며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형중 LAB2050 대표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라며 “카탈루냐 시범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필자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데도 두 나라 모두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 경험을 나누었으면 한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카탈루냐와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에게

카탈루냐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현실적 장애물과 만나게 되는지 보여준다. 한국과 정치제도가 달라 바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카탈루냐는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 간 연합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약을 합의하는 배경이 됐다. 다수당인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민중연합후보당, 카탈루냐 포데모스 등이 연정을 구성하며 소수파의 제안이 정부 공약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전면적 기본소득을 바로 추진하기에 앞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시행’을 명분으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도 우후죽순 유사 기본소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액과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해 사업 확장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

기본소득 도입 전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지극히 보수화되는 국면에선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부터 해보자고 제안할 필요도 있다. “기본소득 즉각 도입하자. 다만 예산이 없으니 일단 ‘용돈’ 수준으로 주자”라는 제안보다 “우선 일부 지역 먼저, 그러나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분명 수용성은 더 클 것이다. 이 같은 전술적 유연함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카탈루냐에서 노동조합 기반 사회당이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기본소득 운동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정치적 반대파는 나올 것이다. 정치적 해결책도 찾아야겠지만, 반대를 돌파하려면 역시 아래로부터 대중의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노동운동과 충분히 권리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노동조합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고용노동의 기득권에 집착해 기본소득에 반대할 때는 투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평범하면서 비장한, 또 경쾌한 그 표현을 카탈루냐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잘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다면 꼭 전달하고 싶다. 어려움 속에 버티는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